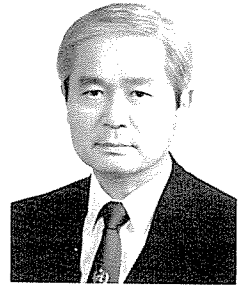




농촌 先進化에 지혜를 모으자

鄭 用 昇 (한국표원대 교수 / 환경과학)



유럽의 선진국민들은 국토와 농지보전에 관한 한 정부에 매우 협조적이다. 그들의 관련 공무원들은 미래적인 국토보전의 관념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있다. 개발도상의 중국도 인구밀도는 우리의 1/3밖에 되지 않으나 국토보전의 생산적인 농지의 활용 및 미래적이고 환경적인 개발에 지혜를 모으며 걱정도 하고 있다.

농지보존 가장 시급한 과제

우리나라는 비좁은 국토 22만km²에 약 7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대만과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인구밀도(매 1km²당 : 남한 445, 북한 208)가 가장 높는데 우리의 인구 및 국토보전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 가로·세로 1천m의 작은 면적에 3백18~4백45명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 국토의 약 70%는 산지이고 겨우 30% 정도만이 경작 가능한 활용면적이란 것은 더욱 끔찍한 것이다. 시골의 단위면적(1km²)에 1천명이 살고, 도시에는 1만8천명씩이나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매우 심각한 국토와 농지문제를 걸머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1인당·활동면적이 겨우 7m×8m임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얼마 안되는 면적이 작년까지는 그린벨트나 절대농지 등으로 보호되었으나, 이제는 농지나 국토보전을 이미 포기한 것 같다. 농지는 현재 신고만으로도 대량 전용되고 있으며, 한정된 농지가 곳곳에서 무계획하게 낭비되고 있음은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다. 신고 및 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이 1백년 대계의 생각을 커녕 행정상 하자의 유무만으로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으며 그들이 미래적이고 국가적인 사명감이 없는 것이 더욱 큰 일이다.

관행의 착오에 관한 쉬운 예를 들어보자. 먼저 서울의 경우, 시청앞 어느 호텔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건물의 동쪽 모서리 2m가 인도에 툭 튀어나와 있다. 건축 당시 담당공무원이 묵인하여 그 건물 모서리가 지난 약 30년간 수십~수백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었고, 앞으로도 몇 십년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시골의 이곳저곳에도 농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음은 작은 국토와 농지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몇몇 지방 공무원들은 근시안적인 관행의 방패막이만 일삼고 있고, 미래적이고 지속적인 현대 농촌환경 건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선도하는 조짐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농약 등 토양오염서 해방을

우리의 시골환경은 각종 농약, 비닐, 쓰레기 등에 의한 토양과 육지 오염으로 점차 저질화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도시의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서 나온 건축쓰레기가 농촌에 쌓여 시각 오염을 만들고 농지의 활용에 장애가 있음도 제도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UR협상이 나온 근본 원인을 살펴보자. 1980~85년에 일본이 여러 분야에 걸쳐 미국을 앞서고 있음을 자인한 미국의 저명 과학자들은 식량경쟁을 하면 그것만은 일본에 지지 않는다고 장담도 하고 예언도 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75년도 이후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 농지 및 미래 식량확보를 이미 꾸준히 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지난 1974~5년의 세계 유통파동도 큰 영향없이 무난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과연 그

들은 놀랍기만 하다.

세계적인 인구증가는 물론 환경 및 사회평준화 문제 등으로 식량(준)전쟁은 언젠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수출을 증대하여 그 이익금으로 '식량은 사다 먹으면 된다'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식량의 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식량이나 농지격정은 별로 하지 않는다. 겨울에 눈이 적고 녹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뭄과 사막화는 국지적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전천후 농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금년 7월의 가뭄은 과연 우리의 식량생산과 기후변화는 얼마나 큰 연관이 있으며 우리의 식생활이 크게 달려 있나를 재차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통일후 南北균형도 고려를

북한의 경우 산지가 더욱 많아 전답은 남한보다 훨씬 적다.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이 많은 반면 벼의 수확이 부족하여 매년 식량난을 겪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남아도는 쌀은 북한에 보내고 대신 북한의 밭곡식을 남한에서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벼가 남는다고 논을 없애버리는 행정과 관행은 정말 통일의 대과업과 미래의 한국을 꿈도 못 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에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 콩 등을 현재 수입에 의존하지만, 수입사료 대신 남아도는 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1:1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비축된(썩어가는!) 양곡은 시급히 사료로써 매년 제품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국민과 사회를 위해 정부는 적자사업도 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군은 많은 장비와 젊은 힘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의 정신과 근육을 쉬게 하지 말고 국민이 사준 장비를 써서 잘 다듬어야 임전태세가 잘 되는 것이다. 군의 장비와 인력의 절반 정도를 농촌개발, 특히 농업용수(관정) 개발과 경지정리 등에 쓰는 것은 결국 국가적인 큰 이익이 되고 토목 등 기업체들에 경쟁력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농민 잘 살아야 先進國 입문

우리는 선진을 갈망하고 있고, 21세기(2001년)까지는 선

진 10개국에 들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리의 농촌을 현재대로 놔두고 선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진국이란 도시와 시골 등의 모든 사회 영역이 평균적으로 보아 상위권의 문화국을 말한다. 고급기술과 수출제품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 농촌의 부락은 구획정리가 시급하며, 이것은 주민과 정부의 협조와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 새로운 농가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현대적인 농가 설계를 현상 공모한 후 선택된 여러 유형의 농가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열에너지 관계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2층의 농가들이 정남(正南)을 향해 서 있는 중국 남동부(상하이 근교)의 과학적인 농가를 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문자답이 되곤 한다. 그리고 약 90%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가 왜 3중 창문의 농가를 개발하지 않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농업용 전기를 원가로 농민에게 제공하듯 각종 농가 건축용 자재를 대기업체로 하여금 원가로 공급케 하며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편의를 제공한다면 농촌이 좀더 빨리 선진화 될 것이다. 또한 농촌을 살리고 현대화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트랙터 등의 장비가 현재 원가의 2~3배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것을 원가로 공급할 수는 없을까?

우리 농촌의 현대화에는 국민의 총체적인 많은 노력과 지혜의 발휘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 국회에도 '농지보전소위원회'가 신설되고 '현대농촌건설소위원회' 등을 두어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꾀하며 세계식량경쟁에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미래적인 농민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군청과 면직원들에게 미래적인 농지보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개념과 철학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농지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단 2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가적이고 미래적인 사명감이 하루 속히 심어져야 하겠다. 농지의 보전과 식량의 자급자족은 지금은 물론 미래의 우리 국민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관련학자들과 국민적인 여론의 수집 및 총화가 필요하다. 농촌의 현대화는 곧 우리의 선진국 입문에 직결되어 있는 명제이며, 미래 우리 국민의 번영 및 보전에 크게 기여된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농촌 문제와 선진화에 관한 일을 서둘러 할 때이다. **ST**